



weekly

2021.01.18.[월]

주요 보험동향 자료

* 각 보고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보도자료

내 용

'21.1.14일부터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원인을 손쉽게 확인

금융감독원 2021.01.13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보험사, 보험기간 등) 확인, 갱신보험료 할인·할증 내역(할인·할증등급, 사고유무, 법규위반 등) 조회, 과거 10년간 자동차사고(일시, 보험금) 및 법규위반(일시, 사유) 조회 등이 가능해지고,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 산출방식을 안내해줌

『통합연금포털』모바일서비스 구축 및 Open API 제공

금융감독원 2021.01.12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체계적 노후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15.6월부터『통합연금포털』을 구축하여 공적, 사적 연금정보를 통합 제공 중임. 스마트폰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PC 기반의 통합연금포털을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금정보를...

보험대리점 대상 준법교육 언택트형으로 실시

금융감독원 2021.01.12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대리점협회는 공동으로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매뉴얼북 배포 등을 통해 언택트형 교육을 실시함. 이를 통해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모집 종사자들의 준법의식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금융교육실무협의체회의 개최, '금융교육개선기본방향' 추진현황과 향후일정 점검

금융위원회 2021.01.07

21.1.7.(목),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교육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20.5.1. 발표)'의 세부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일정도 구체화함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2021.01.06

금융위원회는 '21.1.6.(수)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 제언과 현장 의견에 대해 소통함. '21년 금융산업 전망 및 금융정책제언 등 관련 전문가·업계 의견을 청취함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비급여 통제와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 위한 법안

대한의사협회 2021.01.12

대한의사협회는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민의료비의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민간보험사간 지급률 편차, 보험료율 현실화, 실손보험의 잘못된 상품설계, 의료이용의 모럴해저드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은퇴 및 노후준비를 위한 한 걸음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발간

보험개발원 2021.01.12

보험개발원은「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를 통해 4050세대는 자산이 부동산 등 실물에 편중되어 생활자금 마련에 유동성 제약이 우려되며 공적연금 외에 추가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강화 필요성을 밝힘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통계청 2021.01.12

2020년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5.9%로 전년대비 0.9%p 하락하였으며, 실업률은 4.0%로 전년대비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실업자는 1,108천명으로 전년대비 45천명(4.2%) 증가하였으며, 취업자는 26,904천명으로 전년대비 218천명(-0.8%) 감소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2021.01.11

70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2021.01.11

퇴직 후 재취업 및 자영업을 개시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실업급여 등의 적용제외 대상을 70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으로 상향 조정하여 근로 가능한 고령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활동을 촉진하려 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2021.01.13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은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에게 12대 중과실의 책임이 없음. 그러나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 그에 상응한 책임을 부여해야 하므로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6인 2021.01.11

조합은「보험업법」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되어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나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에 대하여는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2017년까지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음. 이 특례기간을 5년 연장해 2022년에 만료될 예정이나 이를 5년 더 연장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1인 2021.01.11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로 인해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여 당사자에게 고발권을 돌려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2021.01.14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신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게 하며,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게 함

해외자료

내 용

HHS Invests \$8 Million to Address Gaps in Rural Telehealth

미국(HHD) 2021.01.11

미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NAIC Releases 2019 Profitability Report

미국(NAIC) 2021.01.12

NAIC는 2019년 주별 수익성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는 주별, 보험별로 재산, 상해보험의 수익성을 추정한 결과를 포함함

Dormant Asset Scheme to include insurance and pensions

영국(ABI) 2021.01.09

영국 정부는 휴면 자산 제도를 일부 보험 및 연금 상품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해당 자금은 시민단체 및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임

MoUs with UK authorities in the area of insurance and pensions

유럽(EIOPA) 2021.01.08

영국 PRA 및 FCA는 2019년 3월 5일 EIOPA 및 유럽경제지역(EEA) 국가관할당국(NCA)과 보험 규제 및 감독 관련 정보 교환 및 상호 지원 등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2021년 1월 1일 효력이 발효됨

Exposure draft on IRDAI (Regulatory Sandbox) (Amendment) Regulations, 2021

인도(IRDAI) 2021.01.12

인도 보험규제및개발기관(IRDAI)은 보험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9년 7월 시행한 규제 샌드박스 규정(IRDAI Regulatory Sandbox Regulation 2019)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한 수정안을 발표함.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는 기업의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긴점을 감안한 조치임

금융심의회가 2021년도 자배책 보험료 인하를 결정

일본(FAS) 2021.01.13

일본 금융청 자배책보험 심의회는 차량 충돌 방지 장치 보급과 COVID19에 따른 운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이 감소함에 따라 2021년도 자동차배상책임 보험료 인하를 결정함

기건강보험업무 규제강화

중국(CBIRC) 2020.01.11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는 단기건강보험에 관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규제강화를 했으며, 규제강화 내용은 보험계약 갱신, 정보공개, 영업행위 규범화, 보험금지급 규범화에 집중되어 있음

The AMF has published its action and supervisory priorities for 2021

프랑스(AMF) 2021.01.11

AMF는 2021년 조치 및 감독 우선순위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우선순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미래 금융 규제 형성 등이 포함됨
